

## 세계경제의 재편성과 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구상과 역할\*

### 장 병 익

오늘날 세계경제는 2차대전 후 큰 구조변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크게 후퇴된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성장센타로 대두되는 세계경제의 재편성하에서 미·일 경제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NAFTA의 결성과 EC의 통합 등 세계경제에 있어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미 선진국들의 지역주의 및 보호주의의 강화배경과 일본의 국제경제관계의 변화, 그리고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분업의 재편과정을 검토하였고, 일본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역경제협력을 국가차원과 지방차원의 구상으로 나누어서 그 의의와 과제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I. 서론

오늘날 세계 정치·경제는 2차대전 후 큰 구조변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2차대전 후 자본주의세계의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해온 패권국 미국의 경제적 지위의 후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를 결성하게 하였고, 더욱이 지역통합에 의해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EC의 통합은 세계경제의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를 한층 더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sup>1</sup>

1980년대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동아시아(일본, 아시아NIES, ASEAN 및 중국)는 이처럼 세계경제가 지역적으로 재편성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주로 미국시장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해 온 그들의 경제성장전략의 전환을 촉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 제국은 금후에도 지속적 발전을 위해 역내협력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 제2위의 경제규모에 도달한 일본 역시 대미 의존형 국제경제관계의 전환이 촉구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소위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라고 규정할 만큼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또한 일본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안전보장상의 제약에 의해 일본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양국관계는 안정성이 크게

\* 이 글은 교육부 주관 지역연구지원사업에 의해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의 연구비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sup>1</sup> NAFTA와 EC의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白川一郎, 1991)을 참고 바람.

결여되어 있다.<sup>2</sup>

미국경제의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지위후퇴와 반면 일본경제의 대두라는 세계경제의 재편성하에서 미일 경제의 불균형확대는 이와 같은 불균형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그것은 미일관계를 기축으로 하는 현재 일본의 국제관계하에서는 일본의 국제관계 자체의 불안정성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대칭적 미일관계에 기반을 둔 국제관계는 근본적으로 전환이 촉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환의 방향은 일본의 국제경제관계 그 자체를 보다 다각화·다원화하고 그에 따라 균형과 안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다각화라는 것은 미국·일본간 상호의존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켜나가는 것이며, 다원화라는 것은 경제체제와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상호의존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NAFTA 결성과 EC 통합 등 세계경제에 있어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구상은 무엇이며, 또 이에 대한 일본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본 논문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상기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세계경제에 있어서 동아시아지역이 세계경제의 성장중심지역으로 등장함에 따른 선진국들의 지역주의, 보호주의 강화배경과 일본의 국제경제관계의 변화, 그리고 일본과 동아시아의 국제분업의 재편성과정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일본의 아시아지역 경제협력구상을 국가차원의 구상과 지방차원의 구상으로 나누어 검토하며, 4장에서는 국가차원의 경제협력의 의의와 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경제협력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 본다. 5장에서는 4장의 협력과제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경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경제협력을 위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결론을 내린다.

## II. 세계경제의 재편성과 일본의 국제경제관계의 변화

### 1. 세계경제의 재편성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특징은 다음의 3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경제의 패행성이 강화되고 있고, 둘째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일본, 아시아 NIES, ASEAN 및 중국) 지역이 세계경제의 성장센타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째 세계무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주의·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선진국의 실질성장률은 1988년 약 4%, 89년 약 3%, 90년 2.6%까지 낮아졌다.<sup>3</sup> 이같

<sup>2</sup>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 자신도 그 모순을 의식하기 시작하여 대일 정책의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관계의 연구중진인(チャル・マズ・ジョンソン, 1990, 5)를 참조바람.

은 경제성장하에서 선진국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1990년 993억 달러)는 금후에도 그 축소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1990년 358억 달러 흑자)과 독일(1990년 445억 달러 흑자)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간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원인은 선진국투자의 파행성증대에 기인한 것이다. 즉 투자의 파행성은 (1) 미국, 일본, EC 제국간의 설비투자비율과 자본스톡, 자본장비율의 격차와 (2) 기술진보율의 차이를 반영한 산업부문간의 파행성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산업 특히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저하하여 미국의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 선진국간 경상수지 불균형의 배경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의한 불균형 때문이며, 따라서 국제수지 불균형은 선진국간 경제불균형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아시아 · 태평양지역이 세계무역에 점유하는 비율 추이

(단위 : %)

	1965	70	75	80	85	87	88(前期)
輸 出							
美 國	15.8	14.8	13.1	11.5	11.7	10.4	11.6
캐 나 다	4.9	5.7	4.1	3.5	5.0	4.1	4.3
서태평양 지역	10.2	11.1	12.1	14.2	19.9	20.8	20.7
日 本	4.9	6.6	6.7	6.8	9.7	9.6	9.8
아시아 NIES	1.9	2.1	2.6	4.0	6.2	7.4	7.5
A S E A N	1.9	1.6	1.9	2.5	2.5	2.2	2.3
中 國	1.5	0.8	0.9	0.9	1.5	1.6	1.6
호 주	2.3	2.1	1.7	1.4	1.6	1.4	1.5
태평양지역합계	33.2	33.7	31.0	30.6	38.2	36.7	38.1
E C	38.4	39.9	37.4	36.1	35.4	39.9	39.3
輸 入							
美 國	12.7	13.9	12.5	13.1	18.0	17.3	16.2
캐 나 다	4.7	4.7	4.3	3.2	4.2	3.8	4.2
서태평양 지역	9.7	11.4	13.0	14.7	16.6	16.3	17.2
日 本	4.5	6.2	6.9	7.2	6.8	6.2	6.6
아시아 NIES	2.1	2.9	3.4	4.5	5.6	6.4	7.0
A S E A N	1.9	1.6	1.8	2.0	2.0	1.9	2.0
中 國	1.2	0.7	0.9	1.0	2.2	1.8	1.6
호 주	2.6	2.1	1.6	1.4	1.7	1.5	1.4
태평양지역합계	29.7	32.1	31.4	32.4	41.4	38.9	39.0
E C	40.7	40.8	38.7	39.3	34.6	39.1	39.1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및 각국통계.

반면 아시아제국의 경제성장은 순조로운 확대(ADB 가맹국 평균 1990년도 실질성장률 5.7%)<sup>4</sup>를 나타내어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해 가고 있다. 아시아제국의 경제성장은 아시아 NIES와 ASEAN 국가, 즉 동아시아 제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리하여 아시아제국의 경제성장이 미국경제의 후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를 한층 촉진하고 있다.

<표 1>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무역에 점유하는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세계무역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요인이 동아시아 제국의 수출·수입증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85~88년까지 미국, EC, 아시아 NIES, 일본의 4국간 무역추이를 보면 아시아 NIES-일본의 약 2.2배 증가에 비해 미국-일본·NIES가 약 50%, EC-미국이 40% 각각 증가에 그쳤다.<sup>5</sup>

그 결과 세계무역에 점유하는 아시아 NIES의 비중은 1985년 20%에서 1988년 30.8%로 불과 3년만에 약 11% 증가하였다. 이처럼 세계무역이 확대되는 가운데(1988년 8.5% 증가, 89년 8.5% 증가, 90년 5.2% 증가)<sup>6</sup> 확대주도권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 아시아 NIES를 축으로 하는 아시아제국으로 이행되는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당연히 자유·무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GATT 체제하에서 세계무역 제도에 의한 선진국에 대응에 있어서 큰 변화를 초래하게 하였다.

미국의 신통상법에 의한 관리무역경향, NAFTA의 결성,<sup>7</sup> 통일 EC의 등장에 따른 지역주의화(regionalization)가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세계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지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 2. 일본의 국제경제관계의 변화

세계경제의 재편성에 따라 일본의 국제경제관계는 두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첫째,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이다. 우선 무역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수입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데<sup>8</sup> 이는 제품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sup>9</sup> 제품수입 증대는 수요면에서는 환율요인에서 소득요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공급면에서는 생산기지화를 목적으로 한 동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확대(1984년 23.0%에서 90년 38.0%로 증가)가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4 (アジア開発銀行, 1991), (日本經濟新聞, 1991.4.1).

5 (日本銀行, 1988, 12:27-28)

6 (日本貿易振興會, 1990), (日本經濟新聞, 1990.12.19).

7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는 1990년 6월 미국·멕시코간 협상이 개시되어 1991년 2월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의 3국협상으로 진전되었고, 1992년 8월 3국간협상이 체결되었다.(매일경제 신문사, 1992.8.26:37)

8 1988년도에는 전년 대비 19.7% 증가, 1989년에는 10.3%, 1990년에는 13.1%씩 각각 증가하고 있다.

9 제품수입 비율은 1988년 49.7%, 1989년 50.3%, 1990년 49.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무역구조변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이테크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그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가 누적되고 있다.<sup>10</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구미지역 투자는 「시장입지형」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생산기지화」 투자라는 점이다. 이는 일본이 이들 지역으로부터 제품수입 확대를 통해 동아시아 제국과 일본과의 분업관계가 진전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본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금후에도 신장되리라 예상되므로 일본과 동아시아 제국간의 국제분업관계는 한층 심화될 것이다.<sup>11</sup>

국제경제관계의 두번째 특징은 일본이 급속히 채권국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도 말 일본의 해외순자산은 전년대비 11.9% 증가한 3,281억 달러로 세계 1위이다. 이는 금후에도 확대되어 1995년도에는 약 7천억 달러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12</sup> 채권의 증가는 투자수익 확대를 통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일본의 채권대국화는 두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첫째는 국제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불균형을 확대시켜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정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예컨대 미국은 1986년에 채무국으로 전락한 이래 대외채무가 누적되어 1980년대 말에는 4,121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1조 3천억 달러를 상회 할 가능성성이 있다.<sup>13</sup>

미국의 채무누적은 일본의 채권누적과 표리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채권누적은 달러의 신용을 크게 동요시켜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에는 円貨의 국제적 지위상승과 아시아 通貨화이다.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전자(달러의 후퇴)와 후자(円貨의 아시아 통화화)는 표리관계에 있음으로 이는 세계경제 재편성의 통화면에서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 3. 일본과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의 실상

최근 ASEAN과 중국의 급속한 공업발전은 일본과 아시아 NIES의 직접투자, 현지생산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표 2>, <표 3>참조). 일본은 대미 통상마찰의 격화로 인한 엔화절상과 시장개방에 끓기어 노동집약적인 공정을 아시아 NIES에서 ASEAN·중국으로 이전시키고 또한 국내산업구조를 내수형으로 전환시키면서 제품의 역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sup>10</sup> 수출은 1988년도에는 전년대비 14.6% 증가하였고 1989년도에는 0.3%, 1990년도에는 8.4% 각각 증가하였다. 무역수지흑자는 1988년 789억 달러, 1989년 596억 달러, 1990년 546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sup>11</sup> 일본 통산성은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가 2000년까지 년 1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 경우에 일본의 해외 생산비율은 1988년 4.8%에서 2000년에는 약 1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up>12</sup> (野村總合研究所, 1990:18).

<sup>13</sup> (野村總合研究所, 1990:45)

일본의 노동집약적인 가공·조립부문이 아시아 NIES가 아닌 ASEAN·중국으로 이전한 것은 이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기업이 대외진출을 개시했을 때 아시아 NIES는 대미 통상마찰 격화로 수입규제 강화, GSP수혜 폐지, 통화절상과 같은 3중타격과 국내 임금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기지가 아시아 NIES에서 ASEAN·중국으로 재이전되었다 것이다.

〈표 2〉에서 아시아 NIES에 대한 일본의 제조업 투자건수를 보면 1987년까지 급증하였던 NIES에 대한 투자가 그 해를 피크로 격감하였고 그 대신 ASEAN·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1990년에는 ASEAN·중국에 대한 투자가 아시아 NIES 투자의 3.8배나 증가하여 일본의 제조업투자의 38%를 차지하였다.

직접투자의 인가와 조업까지의 타임랙을 고려한다면 1987년 이후 일본자본에 의한 투자량수가 금후에도 지속되어 이 지역으로부터의 제품역수입을 급증시킬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은 ASEAN과 중국이 공업생산을 더욱 확대시킴과 동시에 일본 자본주의의 국제분업관계에 조립·가공기지로 재편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 NIES도 ASEAN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 NIES의 대 ASEAN 투자는 1990년 일본의 대 ASEAN 투자의 2배 이상이다. 한편 아시아 NIES 국가중 홍콩의 대 중국투자는 1991년 말 누계 310억 달러(세계 1위, 전체 외국인 투자의 60%), 대만의 대 중국투자(1991년 말 누계)는 32억 달러(홍콩, 미국에 이어 3위)에 이르고 있으며<sup>14</sup>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도 1985년 14만 4천 달러에서 1990년 1,433만 4천 달러로 약 100배 증가하여, 1990년 말 누계 3,577만 7천 달러에 이르고 있다.<sup>15</sup> 이처럼 아시아 NIES도 ASEAN·중국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표 2〉 일본의 대외 제조업 투자

(단위 : 건수)

년도	NIES	(1) ASEAN	(2) 중국	(1)+(2)(%)	세계
51 - 84	3175	1905	11	1916(18.1)	10573
1984	139	126	30	156(23.0)	677
1985	164	86	51	137(19.1)	718
1986	322	90	38	128(13.0)	981
1987	478	238	58	296(19.4)	1528
1988	365	439	116	555(30.9)	1798
1989	289	495	86	581(31.8)	1829
1990	154	467	113	580(38.0)	1528

자료 : 大藏省, 國際金融局 年報, 各年

이는 1985년 이후 일본의 엔高로 인하여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을 강화할 수 있었던 아

14 (매일경제 신문사, 1992.8.26:49)

15 (이학규, 1992:825)

시아 NIES가 역시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수입규제 강화, 통화절상, 일반특혜관세(GSP) 폐지 통고를 받았기 때문이다.<sup>16</sup>

아시아 NIES의 ASEAN·중국에서의 현지 생산은 우선 대미수출에 있어 마찰을 야기 시키지 않고 자국 통화절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미국이 ASEAN에 공여하는 GSP도 수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이 큰 매력이다. 이와 같이 ASEAN·중국은 일본과 아시아 NIES의 조립·가공기지화 되어 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구미제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현지투자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도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최근 NAFTA 결성, 통일 EC 등장과 같은 경제블럭주의에 대응한 일본의 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표 3〉 ASEAN에 대한 투자 상황

(단위 : 백만 달러)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	NIES	일본	미국	합계
태국	86	36	1	45	10	91	251	41	579
	87	299	13	125	64	501	965	172	1,949
	88	850	109	475	276	1,709	3,063	673	6,249
	89	868	171	562	407	2,007	3,524	550	7,996
	90	761	268	7,137	588	8,755	2,694	1,086	14,066
인도네시아	86	17	22	60	105	84	325	128	800
	87	8	16	122	13	158	512	-62	1,240
	88	913	207	259	151	1,530	256	731	4,409
	89	158	406	407	166	1,197	769	348	4,719
	90	618	723	993	264	2,598	2,241	154	8,750
말레이지아	86	35	2	23	42	101	68	13	428
	87	99	9	12	135	254	185	71	746
	88	147	9	50	66	271	214	97	768
	89	368	29	42	99	537	392	47	1,245
	90	869	59	50	119	1,098	656	69	2,299
필리핀	86	0.4	-	7	0.3	8	22	22	78
	87	9	1	23	1	34	29	36	167
	88	109	1	27	2	139	95	153	451
	89	149	18	133	24	323	158	131	804
	90	120	18	178	12	328	261	51	821

자료 : 日本貿易振興會, 通商弘報, 各年

16 아시아 NIES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986년 37.2%였다. 그 중에서 한국(40%)과 대만(48%)이 두드러졌고, 미국의 「NIES 혼내주기」도 주로 양국에 대해 행해졌다.(小川雄平, 1992, 5:58)

### III. 일본의 아시아 경제협력 구상

본 장에서는 일본의 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을 국가차원의 구상과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구상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국가차원의 구상

일본의 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국가차원의 구상을 「21세기 아시아·태평양과 일본을 생각하는 간담회」<sup>17</sup>가 작성한 「21세기 아시아·태평양과 일본」이라는 보고서의 중점 내용과 1993년 1월 일본수상 미야자와(宮澤喜一)가 ASEAN 4개국 순방중 방콕에서 발표한 「아시아·태평양의 신시대와 일본·ASEAN 협력」<sup>18</sup>이라는 제하의 소위 「미야자와 독트린」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21세기 아시아·태평양과 일본」이라는 보고서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sup>19</sup> 부터 살펴보자.

상기 보고서에 의하면, 2차 대전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정치적으로는 안정과 평화, 경제적으로는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고,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의 격동기를 맞아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도 평화와 번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 지역의 역사·문화·정치·경제의 다양성과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복잡성을 극복하고 「개방성과 다양성의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보고서는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NIES·ASEAN 및 중국이 상호 연결되는 구조전환의 쇠사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메카니즘하에서 지역전체의 고성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같은 발전은 이 지역이 자유로운 무역·투자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sup>20</sup>

<sup>17</sup> 이 간담회는 1992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각 분야의 18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1992년 12월 말까지 10차례의 회합을 가진 후 아시아·태평양의 미래를 전망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1992년 12월 25일 總理府에 제출하였다. (매일경제 신문사, 1993.2.24:90)

<sup>18</sup> (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대사관 광보 문화원, 1993.2.1:1-4)

<sup>19</sup> 동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은 넓개는 남아시아, 남북미, 호주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밀접함 또는 지리적인 거리관계 등에서 볼 때 검토해야 할 테마에 따라 지역별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간담회 보고서는 개별적 논의 목적에 따라 부상되는 지역을 현실범위로 하였는데 가령 안보문제를 고려할 때는 러시아와 인도까지 포함하며, 문화형성을 검토할 때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하였고, 정부개발원조를 논의할 때는 남아시아를 포함시키며,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동아시아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하였다.(매일경제 신문사, 1993.2.24:90-91)

<sup>20</sup> (매일경제 신문사, 1993.3.3:94-95)

첫째, 동아시아 지역에서 각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무역에 대한 장애를 제거해 나가야 하며, GATT체제하에서의 다각적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강화에 노력하고, 일본은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제품수입 확대, 수평분업 촉진, 직접투자 확대 및 기술이전에도 더욱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내 국가간 경제격차 문제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포함해 격차를 시정하고 지역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일본은 각국과 정책적 협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지역주의에 대한 일본의 구상이다. 지역주의가 비난받는 것은 그것이 보호주의 적이고 인위적인 대외차별을 행할 때이며, 단순히 해당 지역국가들이 전통적으로 밀접한 관계하에서 정책협의를 위한場을 만드는 것까지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오늘날의 발전은 자유주의 경쟁메카니즘에 의해 실현된 것이며 구미시장 특히 미국시장에 대한 동아시아제국의 의존도는 여전히 높으며 동아시아제국만으로는 자기완결적인 분업체제를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지역에서는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동아시아지역이 자유개방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EC나 NAFTA를 보호주의적인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책임과 동시에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EC나 NAFTA의 결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서는 동아시아지역에서 대항적인 제도나 배타적인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은 이 지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개방된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지역주의를 고려할 때는 비배타적 무차별적인 자유체제에 적합해야 하고, 제3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투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기구로 기존의 APEC이 지역협력 조직으로서 정책협의, 구조조정, 경제협력, 기술이전 등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망 구축을 위한場을 제공하는데 한층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보고서는 세계경제에 있어서 그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경제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공헌하여야 하며, 일본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자금, 기술지원,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 환경분야 및 인재양성에 대한 원조를 확대시켜 나가며,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신중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지나제국에 대해서 인프라스트럭쳐 정비 등 지원을 아시아 NIES와 「연대형 원조」형태로 추진하며,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의 양성에도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다.<sup>21</sup>

다음에는 1993년 1월 미야자와 일본 수상이 ASEAN 4개국 순방중 방콕에서 「아시아

21 (매일경제 신문사, 1993.3.10:88-89)

정책 4원칙」을 토대로 한 일본의 아시아 구상인 소위 「미야자와 독트린」에 대해서 검토 하기로 하자. 미야자와 수상은 「아시아·태평양의 신시대와 일본·ASEAN 협력」이라는 주제의 정책연설<sup>22</sup>에서 일본의 ASEAN제국과의 협력강화를 강조하면서 인도지나 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구축을 위해 특히 ASEAN 제국과 제휴하여 협력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미야자와 수상의 정책연설 요지 가운데 일본과 ASEAN 제국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과 ASEAN 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개방된 활력 넘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경제가 편협된 보호주의나 지역주의로 향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다각적 무역교섭(UR)을 조기에 성공시키는 일이 긴급한 과제이며 개방된 협력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이제 독자적인 사무국과 예산을 확보하게 된 아시아·태평양 경제 각료회의(APEC) 활동의 더 한층 충실을 도모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1992년도에 책정된 정부개발원조(ODA) 대강에 근거하여 금후에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차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일본은 ASEAN 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종래와 같이 개발도상국원조의 중점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ASEAN 제국 가운데 스스로 개발과정에서 얻은 경험이나 기술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개발도상국간 협력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다. 인도지나 반도에 대한 협력에서 미야자와 수상은 관계국과 국제기관의 전문가, 관민 유식자가 참가하여 인도지나 반도의 국경을 초월한 협력 및 개발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의 및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지나 반도 전체지역의 조화있는 개발전략을 수립하는場으로서 「인도지나 종합개발 포럼」의 결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미야자와 수상은 아시아·태평양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아시아 태평양은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세계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만큼 큰 가능성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아시아·태평양을 더욱 강인하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만들어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하는 일, 그것이 앞으로의 일본·ASEAN 협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주장하였다.

「21세기 아시아·태평양과 일본」이라는 보고서와 미야자와 수상의 「미야자와 독트린」의 공통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EC나 NAFTA와 같은 지역 통합적 성격이 강한 블럭경제를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생각이 없으며, 기존의 APEC를 중심으로 경제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경제협력면에서 기존의 아시아 NIES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ASEAN 제국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특히 인도지나 반도에 대한 경제협력을 아시아 NIES와 ASEAN 제국과 협력하여 추진하며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지원

<sup>22</sup> (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대사관 광보 문화원, 1993.2.1:1-4)

한다는 것이다.

## 2. 지방자원의 경제협력 구상

1980년대 후반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긴장완화의 징조를 보이자 일본의 일본해(동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소위 「환일본해 구상」, 「신일본해 시대」, 「환일본해 경제권」에 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환동해 경제협력권」은 아시아 육지면적의 약 20%, 전체인구의 약 10%(약 2억 9천만명), 총GNP의 약 70%(약 3조억 달러)가 집중되어 있다.<sup>23</sup> 이 경제협력권은 성장잠재력이 EC에 비금갈 정도로 21세기에는 세계에서 유력한 경제협력권의 하나로 대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up>24</sup>

이 경제협력권의 매력은 <표 4>과 같이 일본의 기술·자본 및 경영기법, 한국의 자본과 기술, 중국 동북 3성의 자원과 노동력 및 북한의 노동력이라는 각각의 생산요소를 상호보완하는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 4> 환동해 지역내 각국의 생산요소부존상태

	노동	자원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
한국	-	×	○	○	○
북한	○	○	×	×	×
일본	×	×	◎	◎	◎
중국	○	○	×	×	×
러시아	×	◎	×	×	×

주: ◎:풍부 ○:여유 X:부족

자료: Ding Shi-Cheng, The Golden Delta of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The Delta of Tumen River, 북동아시아 경제협력세미나, 1990.7, 長春.

한 지역내의 경제협력(통합)을 위해서는 그 발전단계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적으로는 시장확대와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되어져야 한다. 전자의 조건을 필요조건, 후자의 조건을 충분조건이라 하고 그 밖의 환경조건 등을 경제협력(통합)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 경제협력(통합)에 따른 기본조건은 다양하지만, R.Erbes, G.Myrdal, J. Diniau, R.Sanwald, J.Tinbergen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25</sup>

첫째, 필요조건으로서 ① 협력(통합)에 참가하는 각 경제주체간에 경제활동의 상호의

23 (産業研究所, 1991:6)

24 (藤間丈夫, 1991:18-19)

25 (Erbes, 1966:106-135), (Myrdal, 1964:11), (Diniau, 1960: 41), (Sanwald, 1959:38), (Tinbergen, 1965:57)

존성이 있어야 하며, ② 각 경제주체의 경제정책 목표와 협력체 전체의 정책목표가 상호 병존할 수 있어야 하며, ③ 각 주체간의 정책목표가 통합과정에서 통합체의 최종목표에 점진적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충분조건은 ① 가맹국간 경제적 관계를 통하여 무역창출기회를 확대하고, ② 비대칭적 종속관계가 아닌 수평적·이질적 산업구조에 바탕을 둔 보완성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환경조건으로서는 ① 각국간의 상품과 생산요소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리적 인접성, ② 종교, 언어, 문화적 동질성 등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오늘날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이러한 조건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상기와 같은 경제협력(통합)의 기본조건과 결부시켜 보았을 때 환동해 지역경제 협력구상은 그 타당성이 크다.

일본의 「환일본해 구상」은 2차대전후 일본해 연안지방(裏日本)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안제국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나온 것으로 1960년대 초 나카소노(中その英助)가 동해연안 각 도시와 러시아 극동지방의 여행견문을 중심으로 일본해시대의 현지보고를 저술, 소개한 것을 효시로<sup>26</sup> 하여 1968년에는 후쿠시마(福島正光)가 「일본해 경제권의 제창」이라는 논문을<sup>27</sup> 발표한 이래 지방의 지식인·정치인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킨데서 비롯되었다.

후쿠시마는 그의 논문 서두에서 일본과 중국간의 국교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동해를 중심으로 주변 각국의 경제협력이 진전되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일본해(동해) 경제권」은 소련(지금의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중국동북부, 남북한, 일본으로 형성되며 지역간 무역확대, 지역협력에 의한 자원 및 국토개발을 통해 각국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더우기 이 경제권이 형성되면 공업화에 따라 생산지대, 소비지대가 형성되고, 지역간 문화교류 및 의사소통이 촉진되어 이 지역의 평화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 경제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공동개발, 공업의 공동개발, 수평적 국제분업의 유지를 통한 상호보완적 산업지대를 형성하여야 하며, 운수·통신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경제권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라는 의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지금까지 과도한 대미의존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을 개발하고 자국내 후진지역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28</sup>.

福島의 주장의 저변에는 과도한 대미의존과 2차대전 후에도 변하지 않고 추진되어 온 태평양 중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福島의 논문은 당시 국제정치 전반에서 일본 및 일본해 연안지역의 자세에 대한 문제를 대담하게 전개시켰을 뿐 아

26 (中その英助, 1964:140-155)

27 (福島正光, 1968, 6)

28 (藤間丈夫, 1968:102-103)

나라 일본의 외교와 경제의 불균형을 균형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상기 두 논문은 지금까지의 수도권중심의 발상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의 번영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福島논문의 영향으로 1970년대초 일본해 지방의 언론계·학계<sup>29</sup>로부터 팔복할만한 협지보고, 기획, 연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일본해연안 지방의 주민의식이 다양해졌고 지금까지 대미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소련 및 한국과의 접촉을 진전시켜 나갔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걸친 각 구상과 제언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확인된다. ① 대미 의존도로부터의 탈피와 새로운 對岸지향, ② 일본해 연안의 후진성 극복, ③ 일본해 연안지역의 독자적 동일성 모색 등이 큰 특징이다.

최근에는 평화지향, 자립형의 「共存」, 「共生」 혹은 「協生」<sup>30</sup>을 바탕으로 한 「환일본해」구상이 이미 구상론단계에서 구체론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세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환일본해 경제권, 환일본해 경제협력, 환일본해 공동개발의 구상으로 지역단위의 경제적 보완관계와 협조관계를 주장하는 경제무역면에서의 접근이 있고<sup>31</sup>, 둘째, 일본해 평화권, 일본해 교류네트워크, 환일본해권 등의 구상으로 종합적 평화안전보장, 일본해의 비핵화, 일본해권 자치교류 등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정치·평화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있으며<sup>32</sup> 세째, 환일본해 문화권 등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한 문화·지역적 측면의 접근<sup>33</sup>이 있다.

그 공통점은 국가본위의 타율적 패권지향이 강한 경직적·편협적 블리주의의 성격이 아닌 지역위주의 자립적·평화지향적 성격이 강하고 유연하고, 관용적인 지역위주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 일본해를 단절, 긴장, 대립의 바다에서 교류, 대화, 協生의 바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9 福島논문의 영향으로 1972년 1년간 매주1회 每日新聞 지방판에 「일본해 시대—그 태동과 내일을 생각해보자」라는 제목으로 시리즈가 연재되었고, 이는 1973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新潟 신문사는 1970년 1월부터 6 개월간 특별기획한 「내일의 일본해」를 연재하였으며, 일본해 연안 지방의 7개 대학 연구회가 일본해 지역의 자연환경조건, 사회경제적 조건, 생활·문화, 산업, 지역 문제에 관한 학술논문의 집대성으로서 「환일본해 구상과 지역개발」이라는 논문을 처음 발간하였다 (日本海 7大學研究會, 1974).

30 新潟대학 환일본해연구회의 사부야(澁谷武) 교수는 「他者·自者 肯定」의 논리를 강조하여 일본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여 종래 「중심—주변」의 관계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공유공간의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澁谷武, 1990, 12:228-233).

31 이에 대한 연구로서 (金森久雄, 1990.9.8:18-21), (金森久雄, 1991.1.26:8- 34), (杉森康二, 1988) 등이 있다.

32 정치·평화적 측면의 연구로서는(Twu Jaw-yann, 1991), (環日本海 社會黨フォーラム 中央實行委員會, 1991) 등이 있다.

33 山陰地方의 島根大學을 중심으로 1988년 3월 「環日本海 松江 國際交流會議」가 설립되어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또 富山市에는 일본해문화의 국제교류를 연구분야로 하는 日本海 文化研究所가 1986년 개설되었다.

일본의 경제발전에는 미국을 위시한 환태평양 지역과의 경제무역관계의 확대가 원동력이 되었다. 일본의 **對 태평양경제** · 무역 확대정책은 일본의 태평양지역(특히 關東, 東海, 近畿 지역)에 상대적으로 편중된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1985년 지역별 공업 출하액 구성비를 보면 關東, 東海, 近畿지역의 전국비중이 73.6%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일본이 2차대전 이후부터 실시해 온 일본의 **對 태평양 경제** · 무역 확대정책에 의해 일본 해에 접해 있는 지역이 태평양에 접해 있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전략에서 등한시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일본의 환동해 4개국(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과의 무역이 전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1980년 8.5%에서 1989년 11.5%), 일본해지역의 환동해지역과의 무역비중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데서도(1980년 6.9%에서 1989년 2.8%)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총수출에서 이 지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수입의 비중 3.2%에 비해 낮아 일본해에 접한 지역이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극히 미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해에 접하고 있는 지역의 수출은 新潟縣과 富山縣에 70% 이상 집중되어 있다.<sup>34)</sup>

이와 함께 東京圈 집중가속화는 지역간 소득불균등을 확대시키며 東京圈으로의 인구 재집중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무실 임대료 급등에 의한 산업활동의 저해, 산업 인프라스트럭처 제약, 거주공간의 부족 그리고 통근시간의 장기화 등 제반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방에서는 고도화된 도시기능의 결핍현상이 나타나고, 고용기회의 다양성이 부족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인구의 대도시, 특히 東京圈에 대한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 경제적 활기를 앓게 하고 또 다시 인재가 유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방인구의 감소경향과 지방경제의 활력저하는 최근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환동해지역의 급격한 정치적 긴장완화는 지방산업의 국제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본해지역의 최대 관심사이다.

일본은 일본해지역을 北陸(富山, 石川, 福井), 北東北(青森, 秋田, 山形, 新潟) 및 北海道 등 3개 지역<sup>35)</sup>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거점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北陸, 新潟지역에 도로, 항만 등 인프라스트럭쳐의 정비와 첨단산업 및 정보화 산업등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환동해 지역경제 협력에 대한 일본의 일본해연안 지방의 구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34) Twn jaw-Yann, 東洋資本主義, 講談社 現代新書, 1990, P.211.

35) 日本海 지역은 이들 3지역 외에도 山陰地方(鳥取, 島根, 山口)과 西九州지방(福岡, 佐賀, 長崎, 熊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 지방들은 환황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1) 황금의 삼각주 두만강 개발 구상에 참여

중국의 동북지방인 黑龍江省, 吉林省은 동해로 진입하는 출구가 없다. 두 省은 러시아와 북한에 의해 동해와 차단되어 있다. 그리하여 현재 흑룡강성의 수출상품의 50%, 수입상품의 80-90%는 遼寧省의 大連港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며, 특히 중국 제1의 산출량을 자랑하는 大慶油田도 원유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大連港에서 수출되고 있어 흑룡강성의 매상과 수익의 상당부분이 요녕성의 수입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상태에서 길립성과 요녕성은 동해로의 직접적인 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두만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36</sup>

두만강은 중국 길립성과 북한의 국경을 통과하는 전장 516Km의 국제하천이다. 하구부근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3국 접경지역이다. 중국은 항행권은 있지만, 동해로의 출구까지 15Km에 이르는 지역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이 있기 때문에 진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1989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북경방문으로 중소국교가 정상화되어 소련측도 두만강 하구의 출해 항해권을 인정하게 되자 길립성의 두만강 개발구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두만강 유역의 항구가 건설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지방간 가장 가까운 해로가 되며, 그렇게 되었을 때 북한의 나진, 청진, 한국의 포항, 울산 등 동해안 공업지대와 부산 그리고 일본의 니이가타(新潟), 오타루(小樽), 아키타(秋田) 등과도 직접 해로로 연결되며, 둘째 연해지방과의 교통망이 정비되면 일본과 한반도의 동해안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가는데 최단거리이다.

이는 요녕성의 大連을 경유하는 것에 비해서는 1,400Km,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나홋카 경유에 비해서는 1,000Km가 단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만강을 활동해 경제협력권의 교통의 요충지<sup>37</sup>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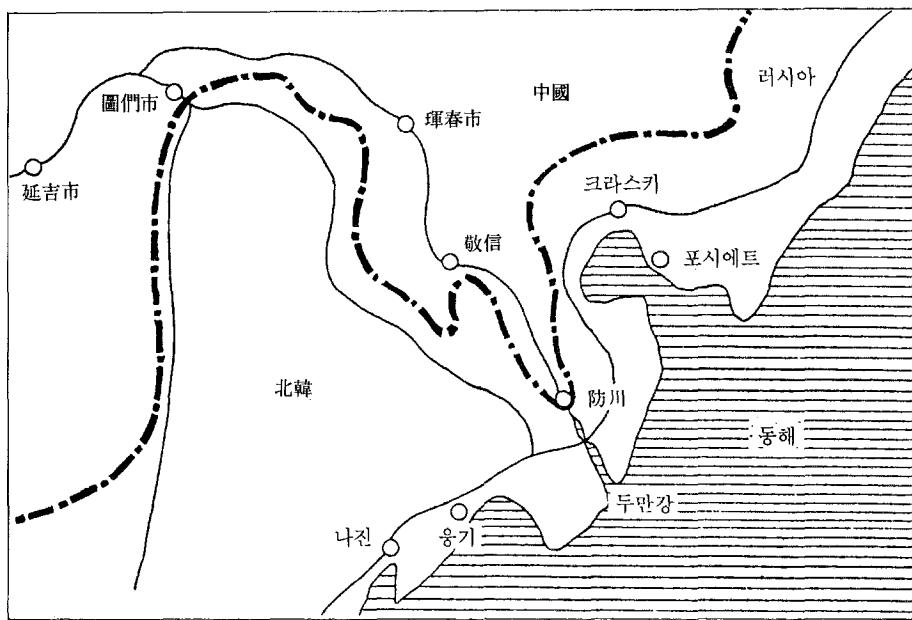
두만강하구는 중국, 북한 및 러시아의 접경지역이므로 3국간 국경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최적지이다. 또한 길립성에서는 훈춘경제개발구, 防川港, 해외기업을 위한 가공공업구를 각각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흑룡강성의 三江平原은 세계 식량기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러시아도 극동러시아의 경제개발과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위한 교두보로서 나홋카, 포시에트, 보스토치누이 등의 항구들을 경제개발지구로 개방하였고 군항이었던 블라디보스톡을 개발하기 위해 大블라디보스톡권 계획을 수립하였다.<sup>38</sup> 북한도 역시 청진, 나진, 선봉에 경제무역지대를 구상하고 있으며, 일본의 니이가타(新潟)는 국제공항의 확장과 노선 신설, 東港 건설, 국제대학 건립, 나가오카(長岡) 테크노폴리스

36 이 구상은 1990년 7월 중국 吉林省 長春에서 개최된 「동북 아시아 경제발전 국제회의」에서 吉林省 과학기술연구위원회 주임인 丁士晟이 제안한 것이다. Ding Shi- Cheng, 1990, 7).

37 이 지역에 항만이 개발되면 두만강 하구지역과 동해안의 포항· 혹은 울산 그리고 일본의 新潟로 이어지는 활동해 황금연안선은 동북 아시아를 이끄는 기관차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전일수, 1992.5:42).

38 (최상철, 1992. 5:5- 6)

〈그림 1〉 대 델타지역의 개요



를 개발하였으며 태평양과 일본해를 연결하는 「日本海 慣通經濟라인」을 추진하여 고속 도로 및 新幹線의 건설이 이루어졌다<sup>39</sup>.

중국은 이 두만강 하구를 축으로 그 후배지에 있는 延吉, 극동의 블라디보스톡 및 북한의 청진을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지대」 개발구상도 하고 있다<sup>40</sup>.

그러나 중국, 러시아 및 북한은 모두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를 위해서는 일본,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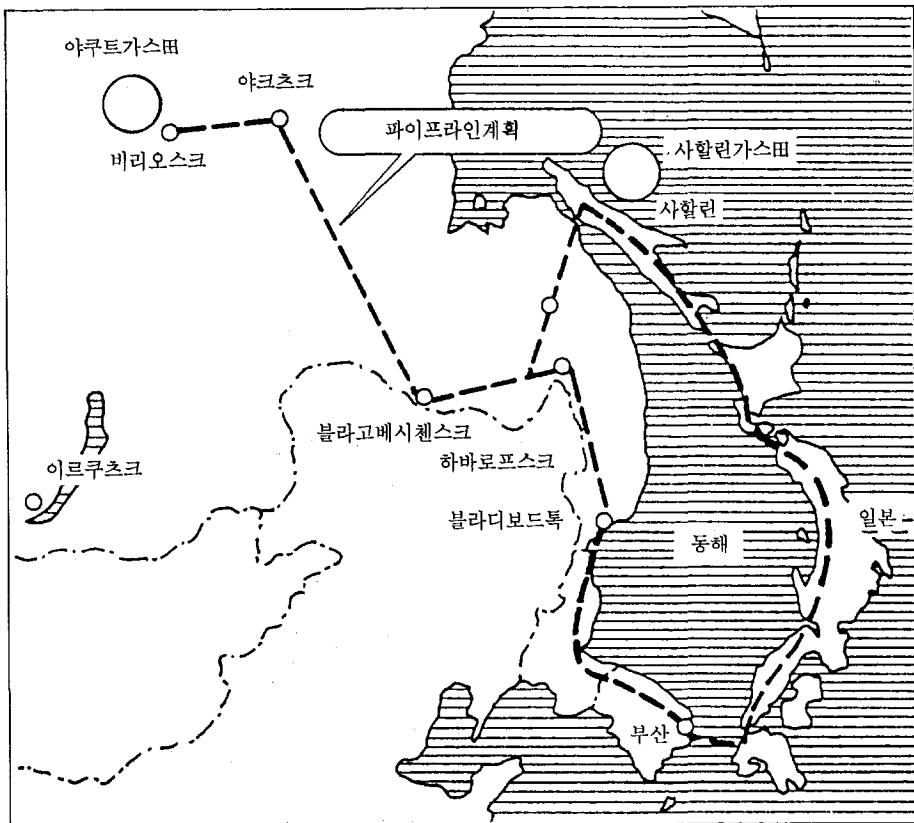
## (2) 환동해 파이프라인 구상

환동해 경제협력에 있어서 핵심사업의 하나가 러시아 극동지방의 천연가스 개발 및 이용이다. 이 사업은 러시아와 일본의 東京무역회사가 공동입안한 세기적인 사업이다. 러시아 극동의 야쿠트 자치공화국에는 추정 매장량 약 1조  $m^3$ 의 방대한 천연가스田

39 (최상철, 1992.5:3- 5)

40 황금의 삼각지대는 남북 약 160Km 동서 약 200Km이며 총면적 1.5만평방Km로서 환동해 경제협력권내의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와는 1,200Km 거리내에 있다.

〈그림 2〉 환동해 파이프 라인 구상



이 있다. 이 천연가스를 동해연안을 둘러싼 파이프라인을 매설하여 일본, 한국, 북한 및 중국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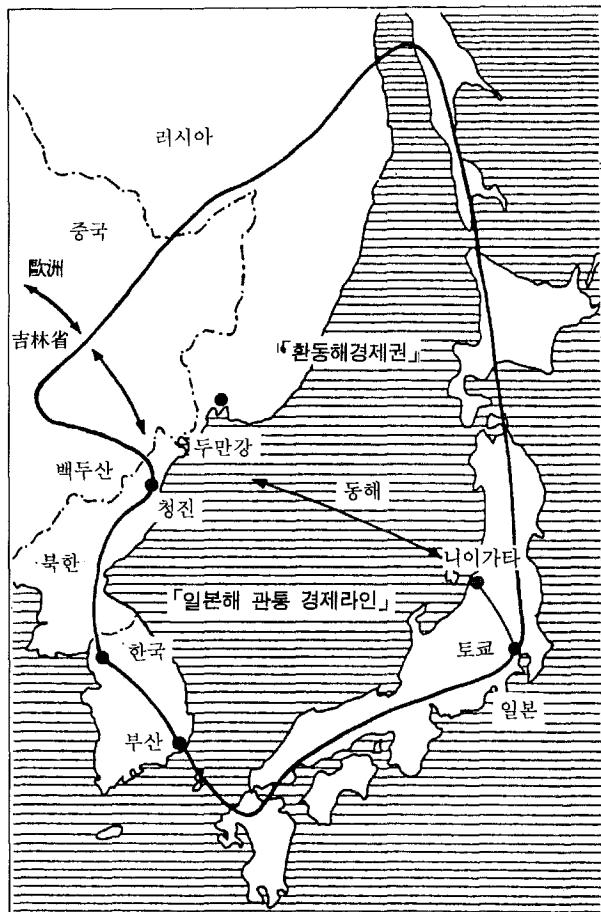
이 계획에는 약 3년간 천연가스를 일정 규모 생산한 후 가스田이 있는 비리오스크에서 구경 약 56인치(1.42m)의 배관을 매설하여 야크츠크, 중국과 러시아 국경의 블라고베시첸스크,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으로 남하하여 한반도의 동해안을 통과하며 부산에서 쪼시마(對馬島)를 거쳐 일본의 키타 큐우슈(北九州)에 상륙한다.

거기서 다시 일본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여 츠가루(津輕)해협을 거쳐 北海道에서 사할린 북부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사할린 앞바다 루니鑛床에는 이미 러시아가 시굴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할린에서 콤소모린스크까지의 파이프라인은 이미 매설되어 있다. 이 파이프라인에 새로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면 파이프라인은 일본해를 한바퀴 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 사업에 참가할 경우 중국측에도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계획이며,

가스田 개발은 주로 미국 석유회사가 담당하고 파이프라인은 일본의 철강회사가 공급하며 건설은 해당국가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건설작업에는 중국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파이프라인은 총연장 1만Km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 3천억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sup>41</sup>.

이 사업이 보다 구체화된다면 환동해 5개국과 미국의 우호협력관계가 한층 더 촉진될 수 있으며, 진정한 「환동해 경제협력」이 시작될 것이다.

〈그림 3〉 동해 환상 탄환루트 구상



41 (藤間丈夫, 1991:74-75)

### (3) 동해環狀 탄환루트 구상

동해환상 탄환루트 구상의 한 시안으로 일본은 하바로프스크——長春——백두산——황금의 삼각지대——청진——서울——부산——九州에 이르는 루트를 생각하고 있다<sup>42</sup>.

또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흐르는 압록강변의 丹東에서 北京까지 약 100Km 구간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루트는 북한을 거쳐 北京까지 연결될 수 있다. 현재 중국측은 大連——瀋陽——北京——天津간 고속도로 개통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루트는 할빈——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동해환상 탄환루트」를 통하여 동북아시아 5개국이 고속도로로 연결되게 된다.

이 루트가 완성되면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시아 5개국 상호간 물류량은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며 大岸제국 지역간 각종 교류도 한층 진전되어 냉전과 단절의 바다가 평화와 교류의 바다로 변모할 것이다.

## IV.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의의와 과제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그것이 일본의 국제경제관계에 어느 정도 의의가 있으며 또 일본의 정책협력의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 1. 국가차원의 경제협력의 의의와 과제

세계경제의 재편과 일본의 국제경제관계의 변화속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인가.

첫째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일본경제의 확대균형노선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역별 무역동향을 보면 아시아 NIES, ASEAN제국, 중국에 대한 수출입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더우기 재화별 수출동향을 보면 아시아 NIES에 대해서는 특히 기계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이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확대와도 관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과 동아시아와의 국제분업관계는 일본경제의 확대균형노선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국제분업관계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 동아시아제국 쌍방에 대해 바람직한 효과를 갖는다. 일본과 아시아 NIES, ASEAN과의 무역결합도는 수출입 모두 1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 이는 일본과 이들 제국과의 상호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과 아시아 NIES, ASEAN의 무역특화계수의 추이를 보면(〈그림 4〉참조), 일본은

42 (藤間丈夫, 1991:145)

이미 1975년 이후 비내구소비재의 경쟁력이 저하하기 시작하여 수입특화를 진전시키고 있지만, 80년대에 들어와 노동집약적 중간재와 자본집약적 중간재의 수출경쟁력이 서서히 저하하여 수입특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내구소비재와 자본재분야에서는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동아시아제국과의 국제분업관계를 고부가가치 분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동아시아제국과의 고부가가치분업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동아시아제국의 산업·무역구조의 중충적 고도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과 동아시아제국과의 상호의존관계 강화는 이런 의미에서 상호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째, 일본의 동아시아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일본의 대미 의존형 국제경제관계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미·일관계의 장래가 우려되고 있다. 미·일간 무역불균형 확대의 근본적 요인은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격차 확대에 기인하므로<sup>43)</sup> 현실적으로 양국의 무역균형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미국의 대일 비판도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미의존형 국제경제관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전환이 촉구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제국과의 경제관계 강화는 이러한 전환을 가능케하는 측면이 있다.

네째, 일본과 동아시아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강화는 동아시아제국의 자립적발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일본은 아시아NIES, ASEAN으로부터 제품수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에 있어서 산업구조의 중충적 고도화를 통하여 일본이 상대국의 자립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대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염려되는 것은 「円經濟圏」 형성의 가능성이다. 이는 국제분업과 금융·통화 양면에서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는 직접투자를 통한 수직적인 분업형성의 가능성이며, 후자는 円블럭형성의 가능성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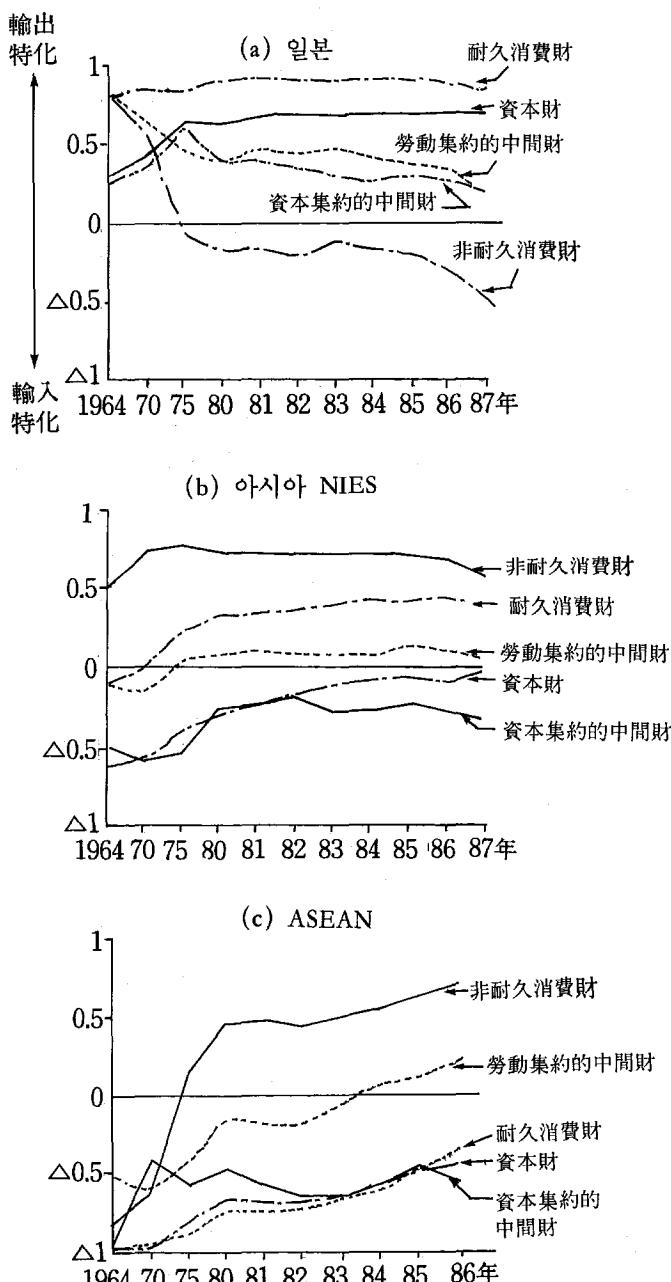
산업구조 뿐아니라 금융·통화면에서도 동아시아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이 지역에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은 쉽게 경제적 지배력으로 전환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동아시아제국의 대부분의 국가가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해 우려 내지 주저하는 것은 바로 이점 때문이다<sup>44)</sup>.

지역경제협력은 결코 이러한 「円經濟圏」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제국의 자립적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역내협력의 일환이어야 하며,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참가를 보장한다는 원칙하에서 이를 제국의 균형 있는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행해져야 한다.

43 (えび名保彦, 1989:71)

44 (Observer, Jan.,7, 1990)

〈그림 4〉 일본·아시아 NIES, ASEAN의 제품별 무역특화계수 추이



자료：經濟企劃廳，世界經濟 白書，1989，東京，p.340.

## 2. 환동해 지방경제 협력의 과제

환동해 지방경제 협력은 지방경제권의 네트워크화에 의한 광역경제권 형성에 그 목표를 둔다면 다음과 같은 지방협력 과제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지방경제권의 중심지역을 「자유무역항 지역(Free Trade Zone)」으로 하고 그 네트워크를 꾀해야 한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는 중국, 북한,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중경제체제론에 근거하여 경제특구방식<sup>45</sup>의 활용이 바람직하다. 또 그 협력방법으로는 “New Aid Plan”방식<sup>46</sup>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전술한 네트워크화를 위해서는 교통·운수수단 및 정보·통신망 등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가 필요하다. 교통·운수수단의 정비는 선박·철도 항공의 종합적인 네트워크화를 꾀하고 그 네트워크를 시베리아철도와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를 이용한 Euro-Asian Traffic System과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정보·통신수단으로서는 광화이버 부설과 지역 위성통신 시스템의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통신시스템은 단지 통신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정보시스템으로서 산업기반정비와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세째, 인프라스트럭처 정비와 관련하여 에너지시스템의 광역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 지역은 에너지자원의 부존지역이며 동시에 공업 및 소비지대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이 크다.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을 상기의 교통·운수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계시킨다면 이 지역의 경제협력은 한층 촉진될 것이다.

네째, 이 지역의 환경보전 협력도 필요하다. 이 지역은 자원부존·농업지역이며 자연환경의 혜택이 크다. 그러나 공업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확대는 공해 및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에너지협력과 함께 환경보전협력<sup>47</sup>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증적 기술이전 시스템의 형성이 필요하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의 공업화 단계가 다양하므로 한편으로는 지역구조의 중증성을 살리기 위한 수직적 국제분업 관계가 유리하지만<sup>48</sup>,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산업·무역구조의 중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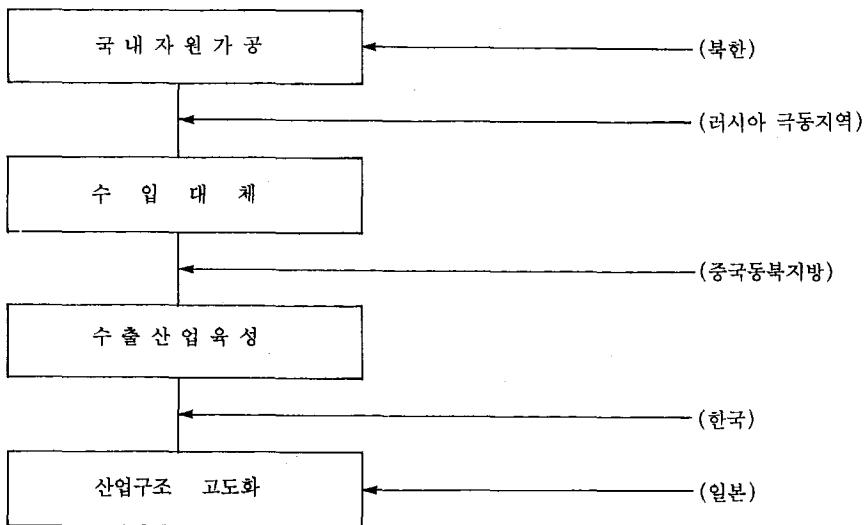
45 「경제특구」는 계획경제체제하의 사회주의 국가가 국제분업에 참가하기 위해 국내의 계획경제체제와는 다른 경제체제, 즉 시장메커니즘에 근거한 경제체제를 특정지역에 도입하는 경우인데 그 지역에서는 외국기업·자본의 합병·합작에 의해 수출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가 꾀해진다.

46 「New Aid Plan」은 원조대상국 중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차관을 직접 투자, 기술이전 및 개발수입에까지 연계시켜 원조를 함으로써 수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개발에 기여한다는 의도로 행해지는 원조방식이다.

47 특히 중국의 산성비 대책, 시베리아의凍土용해에 대한 대책 및 동해의 해양자원보호와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8 환동해 지역에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보완성 발휘를 위해서는 생산요소간 분업방식을 도입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분업방식은 반드시 「수직분업」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직분업, 수평분업은 재화나 서비스의 국제분업에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요소간 분업에 있어

〈그림 5〉 활동해지역의 공업화단계



적 고도화를 통한 분업구조의 수평화가 과제이다. 산업·무역구조의 중층적 고도화에 대응하여 기술이전 시스템도 다각화·중층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상의 지역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협력기금 등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일곱째, 복지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협력도 필요하다. 지역협력은 공업화와 개발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낙후된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정비·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술한 교통·운수, 정보·통신,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도 이런 측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끝으로 지역평준화를 위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지방경제권은 거점개발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산·분배면에서 지역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평등, 불균등 등을 방지한 채 네트워크화를 꾀한다면 지역간 불균형 확대로 불공정·불효율을 놓게 됨에 따라 이는 성장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등·불평등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개입하여 역내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도 자본, 자금 및 기술제공자와 자원·에너지 및 노동력 제공자간에 어떤 종류의 수직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 V.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역할

### 1. 국가차원의 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역할

전술한 국가차원의 지역경제 협력의 의의와 과제를 바탕으로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에 있어서의 역할을 지역(국)별 협력정책과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한 협력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해보자.

#### (1) 지역별 협력정책

동아시아제국의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나 경제체제의 차이를 무시하고 협력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이므로 역내 정책으로 지역적 다양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아시아 NIES · ASEAN 및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대 아시아 NIES 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역할

아시아 NIES는 이미 발전도상국단계에서 선진국단계로 경제발전단계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 국제분업협력에서 일본과 협력하여 직접투자·기술이전협력을 수행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제국의 무역·산업구조의 중층적 고도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미 시장의존형의 성장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경제발전이 취약하다. 이는 수요면에서의 내수취약과 공급면에서 산업구조의 불행성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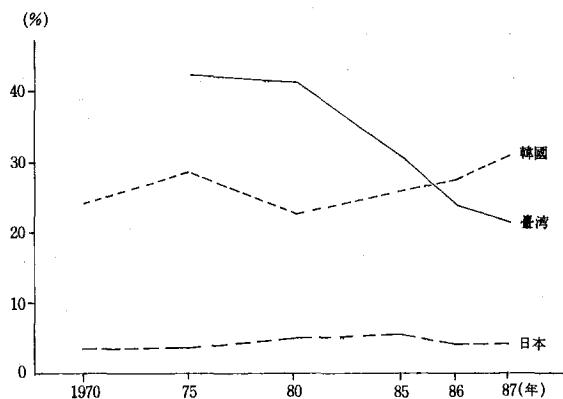
즉 첨단부문에 대한 중간재부문의 발전이 늦어져 이 부문의 수입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그림 6〉참조). 이러한 지원산업의 취약이 무역수지, 특히 대일무역수지의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그것이 내수의 누출을 통하여 성장의 국내적 파급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sup>49</sup>.

그 결과 아시아 NIES는 자본재·중간재수입이 증가하여 대일 入超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또한 대미 出超에 의해 보전되고 있기 때문에 대미 시장의존도가 크다.

따라서 아시아 NIES에 대해서는 지원산업에 대한 일본의 기술이전 및 국제분업협력이 계속 필요하다. 더우기 급속한 공업화와 높은 경제성장하에서 에너지제약과 환경문제도 심각하며 생활환경정비와 사회정책의 낙후가 내수확대를 방해하고 있다. 복선형성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제약의 극복, 환경보전 및 사회개발 등에 대한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49 수요증가의 자국 생산유발효과는 미·일 양국은 9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NIES와 ASEAN의 경우는 50-70% 수준에 머물고 있다(通産省, 1989, 6:3).

〈그림 6〉 일본·한국·대만의 중간재 수입의존도



주 :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중간재(원유등 1차산품 제외)수입을 부가가치 생산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자료 : 通産省, 『經濟協力の 現状と問題點』, 1989, 東京, p.162

## 2) 대 ASEAN 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역할

ASEAN 제국은 무역·산업구조의 중층적 발전 속에 편입됨에 따라 일본과 아시아 NIES와의 국제분업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ASEAN 제국에 대한 국제분업협력에 있어 문제도 간파할 수 없다. 그것은 일본이 직접투자를 일본에 의한 시장제공, ODA공여와 연계시킴으로써 국제분업협력의 종합화·계획화를 시도하려는 것지만, 이러한 「계획적 국제분업 협력」은 대상국의 산업구조나 지역구조의 고도화에 대해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며, 더우기 그것을 ASEAN 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남아시아까지 확대한다면, 그것은 일본을 축으로 하는 지역적 국제분업 협력으로 발전하여 「일본경제권」의 국제분업적 기반형성으로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대 ASEAN 분업협력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상대국의 자립적 발전과 연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ASEAN 제국의 경제·사회구조에 있어서 과행성과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다. 즉 공업화와 경제성장에 비하여 산업기반정비의 낙후, 전력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에너지 계약,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기술인력 부족,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성장지연국의 채무누적 등 산업·경제구조의 과행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급속한 공업화와 고성장하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화<sup>50</sup>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되고

50 「의압적 공업화」는 동시에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킨다. 예컨대 일본과 아시아 NIES 기업의 진출에 따라 현지한 공업화를 이룬 태국의 경우 방콕과 그 근교의 환경오염은 급속히 진행되었다. 1980년 대 설립된 총 3만 1,809개 공장중 공해기업은 2만 707개(65%)이며, 그 공장의 70%이상이 수질오염공장이다(小川雄平, 1992, 5:54).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파행성과 불균형을 방지한 채 국제분업협력을 진전시킨다면 파행성과 불균형은 한층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타개하고 무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환경보전, 생활환경정비, 사회개발 등의 측면에 대해 개선을 꾀하면서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국제분업협력과 함께 경제적·사회적 기반형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3) 대 중국 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역할

중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노선을 고수하면서 연안개방도시 및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역과의 국제분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를 지역의 국제분업에 의한 경제활성화에 의존하는 바가 크며, 국내의 자율적 발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중국의 대외채무는 1990년 말 현재 525.5억달러에 달하고 있다.<sup>51</sup>

중국이 만약 경제개혁의 고삐를 늦추게 된다면 경제는 다시 정체·축소균형으로 나아가 국제경쟁력이 한층 저하하고 그 결과 채무가 더욱 누적되는 악순환을 겪을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대외개방정책의 뒷받침이 되는 국내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의 대 중국협력은 기본적으로는 이중경제체제하에서 중국의 균형있는 개혁·개방노선을 지원한다는 입장에 서서 일본·중국간 국제분업 및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 개발원조(ODA) 정책

종래 일본의 개발원조는 주로 운수·통신·전력 등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쳐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표 5>참조).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기반정비 뿐 아니라 대상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개발에 직접 관여하는 등 그 성격이 변하고 있다<sup>52</sup>.

그리하여 이는 동아시아 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또 이는 단지 경제적 영향력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적 영향력 강화와도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sup>53</sup>.

이처럼 일본의 원조정책은 그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 전환의 방향은 정치적·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제국의 자립과 균형있는 경제·사회발전을 지원

51 (China Daily, September, 3, 1991)

52 (The Economist, July, 25, 1989:12)

53 (The Economist, 1989:12-14), (ロバ-ト・M・オア, 1989, 1, 12)

〈표 5〉 주요 원조국 2국간 ODA 분야별 배분

(단위 : %)

	일 본	미 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사회·행정 인프라스트럭처	18.5	17.5	42.5	32.1	18.5
교 육	8.1	3.8	26.5	19.0	8.1
보 험 · 위 생	3.7	6.3	4.4	2.4	3.7
기 타	6.7	6.8	11.6	10.7	6.7
경 제 인 프 라 스 트 럭 쳐	37.3	3.2	17.6	26.2	21.8
운 수 · 통 신	22.0	1.6	11.1	15.5	6.4
에 너 지	12.3	0.7	2.6	10.6	14.2
기 타	3.0	0.9	3.9	0.1	1.2
생 산 분 야	26.6	16.3	16.4	22.7	26.8
농 업	14.2	11.2	10.1	10.8	18.3
광 공 업	10.9	0.3	4.3	9.1	8.4
기 타	1.5	4.8	2.0	2.8	0.1
멸 티 셰 타	1.7	0.3	5.9	4.7	7.7
논 프로 원 조	8.3	41.7	7.1	4.7	5.6
식 량 원 조	1.4	12.9	1.0	2.9	4.2
긴 급 원 조	0.1	2.3	0.1	0.7	4.4

자료：通産省，經濟協力の現状と問題點，1989，東京，p.97。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발원조는 생활기반 정비, 환경보전 등에 중점을 두어 경제발전의 과정성과 불균형해소에 공헌함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일본의 개발원조중에서 「사회·행정·인프라스트럭처」의 비중은 프랑스·독일에 비해 낮고(〈표 5〉참조), 또 기초적 생활원조에 충당하는 비율은 4분의 1에 머물고 있다<sup>54</sup>. 따라서 이같은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 생활기초 정비원조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우기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원조의 대상을 사회의 광범위한 계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sup>55</sup>.

환경보전대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환경보전 원조를 강화함과 동시에円차관에 대해서도 환경가이드라인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sup>56</sup>.

끝으로 일본의 개발원조의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관련분야 등에 대해서도 비정부조직(NGO) 원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54 (稻田晃久, 1989, 8, 17)

55 (日本經濟新聞, 1989, 12, 6)

56 해외협력기금은 도로, 철도 등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차관을 신청하는 국가에 대해 ①대기오염, 소음 등의 공해, ②문화적 유산과 주민의 이전문제 등 사회환경, ③생태계 경관 등 자연환경, ④환경모니터링 체제 등 4개 항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日本經濟新聞, 1989, 11, 3).

## 2. 활동해 지방차원의 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역할

이 지역 경제협력의 특징은 (1)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2) 체제의 차이를 초월한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교류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활동해 지방 경제협력은 분권적·수평적·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

지방차원의 경제협력관계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1) 국제분업과 관련된 행정·재정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전, (2) 자유무역항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간 수평분업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이 지역에 「해외직접투자와 연계된 원조 및 산업구조조정이 수반된 특혜공여」<sup>5)</sup> 뿐만 아니라 낙후된 산업기반·생활기반·환경보전 및 인력개발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반 협력추진을 위해서는 가칭 「활동해지역 경제협력기금」과 같은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VII. 요약 및 결론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선진국간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선진국의 보호주의·지역주의 강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의 누증·급속한 채권국화가 진행되는 일본의 국제경제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동아시아 제국이 세계경제의 성장중심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동아시아 제국과의 경제협력은 이 지역에서 국제분업의 재편성을 통하여 한층 강화되고 있다.

최근 NAFTA 결성·통일 EC와 같은 강한 지역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일본의 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APEC 활동의 강화, ASEAN 제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인도지나 반도의 경제발전에 대한 협조, 아시아 NIES·중국과 기존의 협력관계유지 및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지원 등이다.

지방차원의 경제협력 구상으로서는 오랜 기간 개발의 축으로부터 소외된 裏日本(일본해 연안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역시 개발의 소외지역인 러시아 극동지방, 중국의 동북지방, 남·북한의 동해안 지역으로 구성되는 활동해(일본해) 지방경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방경제권은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성을 이용한 국제분업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차원의 경제협력은 국제분업과 금융·통화 양면에서 「일본경제권」 내의 편입, 혹은 『円經濟圏』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동아시아 제국의 자립적·지속적 발전을 위한 역내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이 지역의 균형있는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아시아 NIES에 대해서는 중간재 부문에 대한 기술이전 협력이 필요하며, 이들 국가가 복선형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에너지제약의 극복, 환경보존 및 사회개발 등에 대한 협력이 요구된다.

ASEAN 제국에 대해서 일본은 「계획적 국제분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대국의 자립적 발전과 연결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ASEAN 제국은 급격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산업·경제구조의 과행성,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분업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기반형성에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연안부와 내륙부의 이중경제노선을 택하고 있지만, 대외개방 추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일본은 중국의 균형발전과 개혁,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발원조는 일본의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지배력 강화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개발원조는 경제사회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기반 및 환경정비 등에 중점을 두어 경제발전의 과행성과 불균형해소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지방경제 협력의 과제로서는 사회주의 3국의 경제특구에 자유무역항지역 설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 에너지 시스템의 광역화, 환경오염의 방지 등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며,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발전을 위해 일본은 「해외직접투자와 연계된 원조 및 산업구조 조정이 수반된 특혜공여」와 이 지역에서 낙후된 인프라스트럭처 정비, 복지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협력 및 인력개발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간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等分權자치강화가 필수적이며, 이상의 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협력이 필요하므로 가칭 「활동해지역 경제협력기금」과 같은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대한민국 주재 일본 대사관 광보문화원

1993, 2, 1 『일본의 새소식』, 제 256호, 서울:일본대사관  
매일 경제 신문사

1992, 8, 24 『주간매경』, 서울:매일경제신문사

1993, 2, 24 『주간매경』, 서울:매일경제신문사

1993, 3, 3 『주간매경』, 서울:매일경제신문사

1993, 3, 10 『주간매경』, 서울:매일경제신문사

송희연

1992, 5 “동북 아시아 지역경제 협력방안”, 『환동해의 각 지역별 개발구상의 재검토』,  
포항:환동해 지역협력 국제세미나

#### 이학규

1992 “동서경제관계:중국”, 정도영교수 논문집 간행위원회편,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서울:박영사

#### 전일수

1992, 5 “동북아 운송체계의 발전방향과 한국의 과제”, 『환동해의 각 지역별개발 구  
상의 재검토』, 포항:환동해 지역협력 국제세미나

#### 최상철

1992, 5 “환동해 연안도시 개발과 포항광역권 개발방향”, 『환동해의 각 지역별개발 구  
상의 재검토』, 포항:환동해 지역협력 국제세미나

China Daily, (September, 3, 1991).

Ding, Shi-Cheng

1990, 7 “The Golden Delta of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The Delta of Tumen River”,  
長春:東北아시아 經濟協力 세미나

Diniau, J.F.

1960 *The Common Market, its structure and purpose*, London.

Erbes, R.

1966 *L'Integration Economique Internationale*, Presse Universitaire de France, Paris.

Myrdal, G.

1964 *An International Economy*, Haper & Row, New York.

Observer

1990 “Asia faces New Challenge in Politics and Development in 1990s”, Observer, 1990,  
Jan., 7.

Sanwald, R. F and J. Stohler

1959 *Economic Integr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The Economist

July 15, 1989 “A Survey of Yen Bloc”, The Economist.

Tinbergen, J.

1965 *International Economic Intergration*, N. H. Co., Amsterdam.

アジア開發銀行

1991 『年次報告』, 東京

稻田晃久(Inada, Akihisa)

1989, 8, 17 “日本の ODA-基礎的 生活援助に 力點”, 日本經濟新聞  
海老名保彦(Ebina, Yasuhiko)

1989 “世界經濟の構造變動と日本の課題”, 平和經濟計劃會議編, 『國民の經濟白書』, 東  
京:平和經濟 計劃會議

## 大藏省

各年『國際金融局年報』, 東京:大藏省

小川和男・小牧輝夫(Ogawa, Kazuo・Komaki, Teruo)

1991『環日本海 經濟圈』, 東京:日本經濟新聞社

小川雄平(Ogawa, Yuhei)編著

1991『アジア共生の時代』, 東京:同友館

1992, 5 “北東アジア地方間經濟交流の進展と北九州の協力”, 『環東海 各 地域別開發構  
想의 再検討』, 浦港:環東海 地域協力 國際세미나

金森久雄(Kanamori, Hisao)

1990, 8 “動き出す環日本海經濟圈”, 『週間 東洋經濟』, 東京:東洋經濟新報社

1991, 1, 26 “特輯:環日本海 經濟圈の現實”, 『週間 東洋經濟』, 東京:東洋經濟新報社  
環日本海 社會黨フォーラム 中央實行委員會 編

1991『環日本海 新時代 平和と繁榮の配當』, 東京:現代書館

經濟企劃廳

1989『太平洋 地域經濟 中期展望 研究報告書』, 東京:經濟企劃廳

1989『世界經濟白書』, 東京:經濟企劃廳

(財)産業研究所,

1991, 6『東アジア 地域協力に關する調査研究』, 東京:(財)産業研究所  
澁谷武(Shibuya, Takeshi)

1990, 2『他者・自者 肯定思想の 復權』, 東京:サンサ-ラ

白川一郎(Shirakawa, Ichiro)編著

1991『美加 自由貿易協定・EC統合をみる』, 東京:東洋經濟新報社  
杉森康二(Sugimori, Koji)

1988『ゴルバチョーフの世界政策と日ソ關係』, 東京:東海大學 出版會  
チャルーマズ・ジョンソン

1989, 6『アジア・太平洋協力推進懇談會 報告』, 東京:通産省

1989『經濟協力の現状と問題點』, 東京:通産省

1990, 5 “對日政策の焦點はもはや安保ではない”, 『中央公論』, 東京:中央公論社通産省  
Twu Jaw-yann

1990『東洋資本主義』, 東京:講談社 現代新書

1991, 1 “環日本海への提言時代の幕明けに臨んで”, 『世界』, 東京:岩波書店  
中その英助(Nakasono, Eijo)

1964, 3 “ルポルタ-ジユ・日本海時代”, 『世界』, 東京:岩波書店

西重信(Nishi, Shigenobu)

1987“北朝鮮 ルート論と朝鮮人の間島移住”, 『經濟學論集』, 第37卷 4號, 大阪:關西大學  
(1987).

日本海 7大學 研究會編

- 1974 『環日本海構想と地域開発』,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日本銀行  
 1988, 12 “世界經濟の回顧と展望”, 『調査月報』, 東京: 日本銀行  
 日本經濟新聞  
 1991, 6, 4 “經濟協力開発機構の經濟見通し”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日本 貿易振興會  
 1990 『'91年 世界經濟豫測』, 東京: 日本 貿易振興會  
 各年 『通商弘報』, 東京: 日本 貿易振興會  
 野村(Nomura)總合研究所  
 1989.4, 1990 『中期經濟展望』, 東京: 野村總合研究所  
 福島正光(Fukushima, Masamitsu)  
 1968.6 “日本海 經濟圏の提唱平和と繁榮の第3の 道”, 『コリア評論』, 東京:  
 コリア 評論  
 藤間丈夫(Fujima, Takeo)  
 1991 『動き始めた環日本海 經濟圏』, 東京: 創知社  
 ロバート・M・オア  
 1989.1, 12 “援助大國日本を見守る美新政權の期待と懸念”, 朝日新聞

### The Japanese Plan and Role on the Rearrangement of the World Economy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of Asia

Byung-ik, Chang

After World War II, the world economy has been met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From 1980s' the economic status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reduced in the world market, but the East Asia countries have appeared on the growth stage of the world economic rearrangement.

In the meantime, the economic imbal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s expanded , and the international market has increased the trade barriers of different groups against outsiders, such as the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EC (European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know the background of the West Countries' regionalism and protectionism,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division pattern which is

divided both national and local dimensions between Japan and East Asia, and to analyze these meanings, problems and roles.

장병익,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Tel : (0522)78-2427(O), (0522)78-2762(H)